
 금융위원회		<h1>보도자료</h1>				 금융감독원	
<b>보도</b>		2019.1.17(목) 조간		배포		2019.1.16(수)	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(02-2100-2660)			담 당 자	김 영 민 사무관 (02-2100-2668)		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경 식(02-3145-6700)				황 선 오 팀 장 (02-3145-6710) 김 동 철 팀 장 (02-3145-6725)		

## 제 목 :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

- 2019년 1월 17일(목)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」 및 「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」을 입법예고
-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핀테크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을 확대
    - \* ①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(40→15억원), ②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, ③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·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등
  -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('18.12.31. 공포, '19.7.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
    - \*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, ②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구체화 등
- ➔ 자산운용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확대하고,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

### 1. 개 요

□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등을 완화\*하고,

\* “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(총리실 주관, ‘18.11.21)”시 발표 내용의 후속조치

-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('18.12.31. 공포, '19.7.1. 시행)이 개정\*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

\* 개정내용 :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,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, 신고사항 직권말소권 도입,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

## 2. 주요 내용

### (1)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 (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후속조치)

#### ①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(금투업규정 §477)

- (현행)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**40억원**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

-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**40억원을** 충족하기 곤란

- (개선) 로보어드바이저 **활성화**를 위해,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(40억원) **폐지**\*

\*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되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(15억원)만 충족하면 됨

#### ②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(시행령 §2, §87, 금투업규정 §1-2의2)

- (현행)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**운용가능**\*하나, 펀드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것이 제한

\* 투자자문·일임의 경우 지난 '17.5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문·일임을 하는 것을 허용

- (개선) 일정요건\*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**펀드재산 운용** 허용

\*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,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

#### ③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(금투업규정 §44의2)

- (현행)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·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제한

\* 현재 펀드·일임재산 운용업무의 경우 본질적 업무이며, 본질적 업무의 경우 동종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 가능

- (개선)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·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

- 다만,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(자산운용사)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

※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발표내용 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 참여 허용은 현재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 중('19년 상반기 완료 예정)

## [2]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

### [1]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 구체화 (시행령 §102)

- (법률 개정사항) 유사투자자문업자(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)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,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
- (시행령 개정안) 금융투자업자 인가·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\*으로 규정

\* 유사수신행위법, 은행법, 자본시장법, 상호저축은행법, 대부업법, 금융실명법, 신용정보법, 외국환거래법 등 49개 법령

### [2]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 규정 (금투업규정 §4-80의2)

- (법률 개정사항)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면서 구체적 내용\*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

\* 교육의 실시기관,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

- (감독규정 개정안)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
    - (실시기관/방법) 금융투자협회 / 집합교육
    - (대상)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려는 자(법인의 경우 대표자)
    - (내용)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, 불건전 영업행위 등
    - (절차)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교육 이수
- ※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

## 3. 기대효과

### [1] 자산운용분야에서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

-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펀드·일임재산 운용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가능
- 기관, 고액자산가 위주의 기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
  -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 확대를 통해 소액을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가능

## ②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 피해 방지

- 금융관련법령 위반자, 교육 미이수자 등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금지 가능

## 4. 향후 일정

- 입법예고(1.17~2.26), 규제·법제심사, 차관·국무회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·시행

### □ 시행시기

#### ①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

-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: 공포 후 즉시
-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,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·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: 공포 후 6개월 후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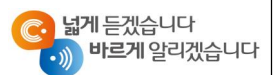
\*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가능 여부를 심사할 시스템 구축(코스콤에서 구축예정)에 필요한 기간 고려

#### ②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 : 개정법 시행일('19.7.1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□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편법적 영업행위 발생 시 신고사항 직권말소 규정 등 신설

#### ① 영업신고 불수리 근거규정 신설

- (현 행) 영업신고에 대한 불수리 규정 부재 → 신고 거부 불가
- (개정안) 영업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는 사유\* 신설 → 신고 거부 가능

\*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, 자진폐업·직권말소 후 일정기간(자진 폐업: 1년, 직권말소: 5년) 미경과, 건전영업교육 미수료자 등

#### ② 신고사항 직권말소 규정 신설

- (현 행) 불법행위 등 발생 시에도 신고 말소 불가
- (개정안) 금융관련 법령 위반, 폐업, 보고·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등 발생 시 신고사항 직권 말소 가능

#### ③ 신고 유효기간 도입 : 5년, 5년 경과 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새롭게 신고할 필요

#### ④ 미신고 영업 행위 등 제재 강화

	현 행	개 정 안
미신고 영업 행위	과태료 (3천만원 이하)	형사벌 (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
보고·자료제출 의무 미이행	제재없음	과태료 (3천만원 이하)

※ 영업신고 불수리 또는 신고사항 직권말소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시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